

# “국회 병력 투입·포고령 작성, 김용현 장관이 사실상 지휘”

### 국방위 현안질의...박안수 “장관이 포고령 초안 전달...검토 필요 건의”

### 국방차관 “병력 투입 장관이 지시...군병력 동원 반대 부정적 의견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거나 반대했고,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총합과 선후배 사이인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주도한 것을 넘어서 사전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며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 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또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진짜 모

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역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전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총장이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전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답해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면서 “이후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포고령을 순간적(빠르게)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도 “현재 (포고령)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고령 제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포고령은 또 포업 전공회의 본업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등 전

혀 통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읽었다. 그런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렵하나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면서 “다시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전화가 왔고, 당시 (포고령 초안에는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간만 23시로 수정해 (공포)했다”며 어수선했던 당시 모습을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 “명백한 반국가 내란 행위”...비상계엄 성토장 된 국회 상임위

### 행안위 “윤 내란 수괴 수사 받아야”

### 국방위 계엄 실행 군 한목소리 질타

### 조규홍 복지장관 “동의하지 않았다”

5일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의 문제점과 법률 위반 사안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화를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행위”...“야당의 단정”=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위원장은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가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이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

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질의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 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자는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실행한 군 한목소리 질타=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

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 “동의하지 않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면서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출국금지...면직 당일 전격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 걸어 국회 출입통제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